

WEEKLY CLIMATE REPORT

탄소중립&기후변화 국제동향



5월 둘째 주 주요 동향

- 01 (EU) 6개월 내 러시아산 원유 매입 중단 제안 (5.2.)
- 02 (미국) EV배터리 제조 지원, 재생에너지 세액 공제 및 탄소국경세 논의 (5.2.)
- 03 (인도) 모디 총리, 주 정부에 폭염 대책 마련 지시 (5.6.)
- 04 (콩고) 세계 최대의 이탄지 중 일부를 석유 시추지로 임대 (5.3.)
- 05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키갈리 개정안 동의 (5.5.)
- 06 (캐나다) 기록적인 수익에도 불구하고 석유 기업 CCUS 보조금 증액 요청 (5.5.)

01

(EU) 6개월 내 러시아산 원유 매입 중단 제안¹⁾²⁾ (5.2.)

- EU집행위, 올해 내 러시아산 원유 및 정제제품 단계적 수입 금지 공식 제안
 - 단기적인 가격 인상과 연료 부족을 감내하겠다는 독일의 발표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재선 이후 對러시아 제재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이 수입 금지 발표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알려짐
 - 해당 제안의 회원국 만장일치 통과를 위해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각각 60%, 100%로 높아 러시아에 대한 전면 제재를 반대해온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제재에 참여하지 않을 것
- 한편, 독일은 북유럽과 발트해 항구를 통해 LNG 수입 및 공급이 어려운 동유럽 국가*들의 수입을 지원할 계획
 - * 내륙국가인 체코는 가스 수입의 90% 이상을 러시아에 연결된 파이프라인에 의존
 - 독일은 이를 위해 올해 내 북해에 4기의 부유식 저장소를 임대하고 LNG 가스화 설비를 가동할 계획
- 또한,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G7 정상들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의 단계적 중단에 합의

02

(미국) EV배터리 제조 지원, 재생에너지 세액 공제 및 탄소국경세 논의³⁾⁴⁾ (5.2.)

- 바이든 행정부, 초당적인 프라법에 포함된 EV배터리 제조 지원을 위한 31억 달러 보조금 프로그램 발표
 - 전기자동차와 리튬이온 배터리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배터리 생산과 재활용 기술에 투자, 전기차 공급망 안정화와 해외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계획
- 10여 명의 초당파 의원들은 지난 2주간 3차례의 회의를 통해 기후패키지 논의를 이어감
 - ‘더 나은 재건법’ 기후패키지의 주요 구성요소였던 재생에너지 세액공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원전과 탄소포집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짐
 - 또한, 지난달 대법원 결정을 통해 부활이 결정된 국가환경정책법(Nat'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에 대한 공화당의 반대 의견 역시 관찰됨
 - * 고속도로와 파이프라인과 같은 프로젝트 추진 시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하는 규제.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법이 개발사업의 속도를 지연하고 일자리를 축소하며 에너지 주권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폐지. 전문가들은 비축유 방출 결정, 석유·가스 증산을 지시한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에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평가
 - 탄소국경세 지지 의견을 밝힌 빌 캐시디(Bill Cassidy) 상원의원은 현재의 수출입 시스템

1) Climate Home News, EU plans stop buying Russian crude oil in six months (5.4)

2) Euractiv, Germany ready to help landlocked EU states access LNG, Scholz says (5.6)

3) The Hill, Lawmakers consider carbon boeder tax, environmental reviews at bipartisan climate meeting (5.2)

4) The Hill, Biden administration announces \$3B to support EV battery manufacturing (5.2)

하에서는 환경규제가 느슨한 중국, 인도, 베트남 등과 같은 국가들이 탄소배출을 고려하지 않아 제품을 싸게 생산하고 있으며, 탄소국경세 도입 시 국내 근로자 및 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 발언

- 조 맨친 의원은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북미지대(North American zone)’를 구축해 탄소국경세 도입 주장

03

(인도) 모디 총리, 주 정부에 폭염 대책 마련 지시⁵⁾ (5.6.)

- 인도는 3월 평년기온보다 1.86°C 높은 33.1°C를 기록, 지난 100년간 가장 더운 3월로 기록
 - 3월 말부터 북서동부 지역 기온이 40°C를 넘어서면서 현재까지 24명의 사망자 기록
 - 과학자들은 이른 여름의 시작은 기후변화와 관련 있으며 인도와 파키스탄의 인구 10억 명이상이 폭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평가
 - 모디 총리는 연방 각료들과의 회의에서 폭염과 화재로 인한 사상자를 최소화하고 몇 주 내로 시작되는 몬순 시즌의 홍수와 식수 오염에 대비할 것을 당부

04

(콩고) 세계 최대의 이탄지 중 일부를 석유 시추지로 임대⁶⁾ (5.3.)

- 콩고 민주 공화국(이하 콩고) 각료들은 탄소흡수원 역할을 하는 열대 이탄지의 석유 시추 경매를 승인
 - 승인된 16개의 시추 블록 중 9개가 세계 최대 규모의 열대 이탄지인 콩고 중앙 분지(Cuvette Centrale)에 위치해 있으며, 이 중 3개 블록이 이탄지대와 직접적으로 겹치는 것으로 분석
 - 과학자들은 콩고의 열대 이탄지가 전 세계 CO₂ 배출량의 3년분에 해당하는 양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으며 이탄지의 토지 이용변화가 있을 시 콩고의 주요한 배출원이 될 것으로 추정
 - 중남부 아프리카에서 앙골라 다음으로 많은 원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콩고는 하루 25,000배럴의 석유를 시추해 전량 수출하고 있으며, 정부 수입을 늘리기 위해 증산을 계획하고 있음
 - COP26에서 영국, 한국, 노르웨이 및 일부 EU 국가는 중앙아프리카 산림이니셔티브(Central Africa Forest Initiative, CAFI)*를 통해 향후 5년 동안 5억 달러를 지원해 산림보호를 약속했지만, 콩고 정부의 결정으로 해당 이니셔티브의 효과가 떨어질 것

* CAFI 협정은 이탄지에서의 석유 시추 금지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호 구역에서의 석유 시추 금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23년 말까지 광산업 및 석유 시추 허가가 보호구역, 산림, 이탄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

5) Reuters, India's Modi asks states to prepare heat action plans amid rising temperatures (5.6)

6) Climate Home News, DR Congo approves auction of oil blocks in one of the world's largest carbon sinks (5.3)

05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키갈리 개정안 동의⁷⁾ (5.5.)

-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수소불화탄소(HFCs)^{*} 감축 조약인 몬트리올 의정서에 대한 키갈리 개정안^{**} 비준을 구두투표를 통해 만장일치로 동의해 상원의 표결을 거칠 전망
 - * 주로 냉장고와 에어컨의 냉매로 쓰이는 HFC는 CO₂의 1,430배에 달하는 지구 온난화 잠재력을 가진 가장 강력한 온실가스
 - ** 선진국은 '36년까지 HFC의 85% 감축, 개도국은 '46년까지 HFC의 80% 감축
- '16년 르완다 키갈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3)에서 미국은 개정안에 합의했지만, 의회에서 비준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음
- 키갈리 개정안을 전 세계적으로 시행할 경우 21세기 말까지 최대 0.5°C의 지구 온난화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
- 키갈리 개정안 비준은 신냉매 개발 및 상업화를 기회로 보고 있는 산업계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국내 냉난방 및 공조 업계 보호를 위해 무난히 상원 표결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

06

(캐나다) 기록적인 수익에도 불구하고 석유 기업 CCUS 보조금 증액 요청⁸⁾ (5.5.)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기록적인 수익을 보고한 캐나다 오일샌드 업체 MEG 에너지와 시노버스(Cenovus) 에너지는 정부의 CCUS 보조금 증액 요청
 - 정부는 '30년까지 기업이 CCUS 프로젝트에 투자 시 50%의 세액공제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6억 달러 지출 예정, 이 보조금은 '30년까지 86억 달러로 늘어날 전망
 - 환경단체들은 CCUS 보조금은 청정에너지 전환을 지연시키고 석유·가스 업체들에 납세자들의 세금이 흘러 들어갈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운송, 냉난방 전기화를 촉구
 - 캐나다에서 포획된 CO₂ 대부분은 석유증진기술(enhanced oil recovery, EOR)^{*}에 재사용되어 더 많은 석유 시추에 이용되고 있는 실정
 - * CO₂를 유전에 주입해 석유 시추의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
 - NGO인 Environmental Defence Canada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석유·가스 업체가 CCS 기술개발을 위해 수령한 보조금은 58억 달러에 달하지만, CO₂ 포집률은 캐나다 전체 배출량의 0.05%에 그침
 - 또한, CCUS 프로젝트의 대부분은 생산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배출량의 80%에 달하는 석유 연소로 인한 배출량 감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

7) E&E News, Is Kigali the key to future climate legislation? (5.5)

8) Climate Home News, Amid record profits, tar sands companies want more subsidies for carbon capture (5.5)